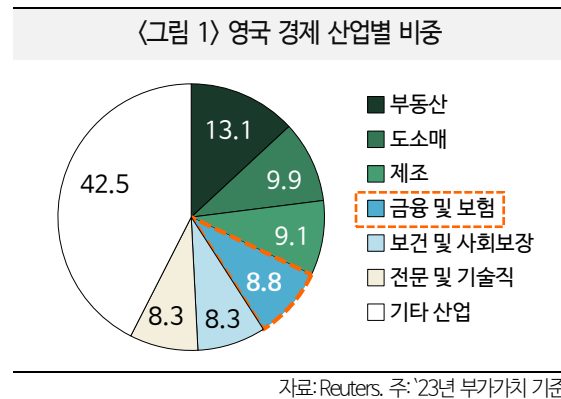


영국의 금융 종합 개혁안 “리즈 개혁” 내용 및 평가

황원정 | 책임연구원(3705-6156)
 이상원 | 글로벌은행부장(3705-6216)

□ [이슈] 영국 재무부는 7.15일 자국 경제의 9%를 차지하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종합 개혁안 “리즈 개혁(Leeds Reforms)”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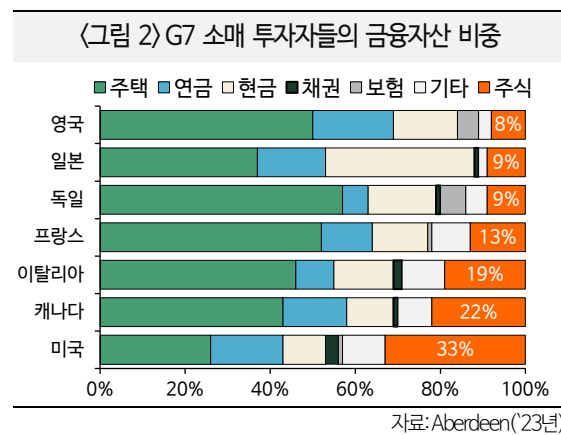
- 영국 정부는 리즈 개혁을 통해 '35년까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의 위상을 회복시키고, 그에 따른 투자 유치와 양질의 숙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
 - 금융서비스 순수출의 실질 성장률을 '14~'24년(연평균) 1.47%에서 '25~'35년 2.7%로 늘리는 것(25~35년 누적 증가율 30%)이 목표



- 주요 내용은 △소매투자 활성화 △투자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제거 △자본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은행 투자여력 확대 △핀테크 혁신 촉진 △인재 확보 및 양성<표 3, p.5>
 - 영란은행BOE, 금융감독청FCA 등 은행 규제·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 및 계획들도 동 개혁의 일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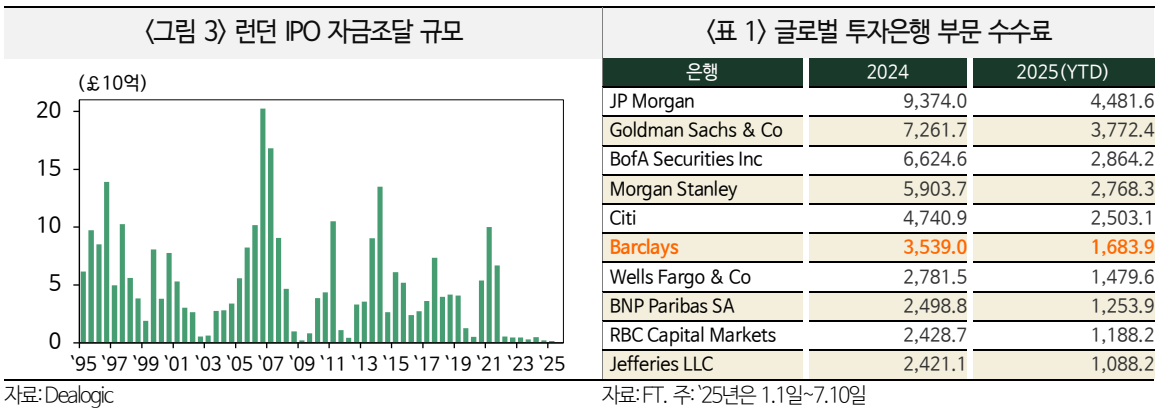
□ [영향] 리즈 개혁은 영국 은행권의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. 다만, 소비자 및 예금자 보호 약화, 은행 회복력 저해 등 규제 완화의 부작용도 잠재

- (자본시장 활성화 ⇒ WM·IB 수익 확대)
 - 소매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확대, 주식시장 활성화는 은행의 자산관리 및 투자은행 부문 수입(IPO 및 트레이딩 수입 등)으로 연결
 - 영국 소매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미국 수준만큼 증가할 경우(+25%p), 자본시장에 £3.5조*(성인 총자산 £14조 기준)의 자금이 유입 가능할 것으로 추정(Aberdeen)



* 영국 주식시장 시가총액('25년 7.23일 기준 FTSE100 £2.3조) 비교 시 규모 상당

- 과거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지였던 런던은 최근 몇 년간 기업공개IPO가 하락하는 등 부진 양상을 보였으나 개혁 조치로 인해 IPO 확대 및 투자은행IB 경쟁력 제고도 기대
 - 런던 주식시장의 IPO는 '21년 이래 감소하며 올해 상반기 5건에 그쳤으며, 조달 규모로는 30년래 반기 최저 수준(£1.6억)을 기록(Dealogic)
 - 전세계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 상위 10개 은행들 중 미국계 은행은 7개인데 반해 영국계 은행은 Barclays 1개에 불과



○ (불필요한 규제 제거 ⇒ 모기지 사업 제고) 모기지 규제 완화로 관련 대출 확대 시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 기대. 그 외 FOS*, SM&CR**, 소비자보호_{Consumer Duty} 제도 등의 개선도 은행의 법적 리스크를 축소해 관련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

* Financial Ombusman Service(금융옴부즈맨 서비스) : 소비자과 금융기관 간 금융분쟁 해결
 ** 고위 관리자 및 인증 제도(Senior Manager and Certification Regime) : '08년 금융위기, '12년 LIBOR 조작 사건 이후로 금융회사 고위 관리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

- 모기지 규제 완화로 고위험 대출이 급증할 경우 은행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겠지만, 대출 증가가 급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(Fitch)
 - BOE는 개별은행의 고위험 모기지 대출(LTI>4.5배)이 늘더라도 은행시스템 전체로 보면 총한도인 15%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('25.1Q 9.7% → '25년 말 11%)
 - 한편 건전성감독청PRA은 모기지 대출에 대한 내부등급법 적용을 간소화할 계획인데, 모기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가격 수용자_{price-taker}인 소형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경감되어 가격 결정력과 대출 여력이 완만하게 증가할 가능성(Fitch)
- 그 외 FOS, SM&CR, Consumer Duty 등도 은행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비용 절감 기대
 - 예를 들어 FOS의 현대화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소비자 민원 차단, 판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로 민원 수수료, 보상액 등 은행의 법률적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
 - * '24.3~'25.3월 대형은행 FOS 수수료는 Lloyds(£1,260만), Bardays(£900만), Santander(£514만), NatWest(£513만), HSBC(£450만)

- (자본규제 완화 ⇒ 대출·투자 확대) 중형은행의 최소자본규제_{MREL} 완화, 트레이딩북에 대한 자본 규제_{FRTB} 적용 연기 등은 은행권 전반의 자본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출·투자 여력을 확대. 아울러 링펜싱^{*}_{ring-fencing} 규제 개혁도 은행들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

* 링펜싱 규제 : 소매/SME 등 핵심예금 규모(3년 평균)가 £350억 이상인 은행의 경우, 소매·투자 은행 부문을 분리

- MREL 적용 기준이 '26년부터 상향(£150억~250억 → £250억~400억)되고 3년 주기로 경제 규모를 반영해 변경됨에 따라 중소은행들(OneSavings Bank, Metro Bank 등)이 수혜(RBC)
- 또한 챌린저뱅크 및 전문은행의 중소기업 신용공여 확대로 실물경제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소지

- 링펜싱 규제의 경우 리브스 재무장관, 베일리 BOE 총재 등의 발언을 고려 시 전면적 폐지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일부 규정의 완화*가 예상

* 투자-소매은행 간 서비스 공유 : 인력, 시스템, IT, 리스크 관리 등 중복 서비스 공유를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

〈표 2〉 영국 주요은행 자산 및 소매예금 규모(단위: £10억)

은행	총자산	예금
HSBCUK	3,054.3	349.8
Barclays	1,593.5	243.1
Lloyds Banking Group	909.9	487.7
Standard Chartered	874.4	490.9
NatWest	710.0	434.6

자료: 각 은행(25.Q1). 주: 총자산은 그룹 전체

- 영국 대형은행들 및 현지에서 영업하는 해외 은행들(JPMorgan, Goldman Sachs 등)은 정책 당국에 규제 철폐 또는 예금의 투자 은행업 활용 일부 허용(최대 £350억) 등을 요구한 바 있음
- * 대형은행 중에서는 Barclays가 유일하게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면서 링펜싱 규제의 전면 철폐 등에 반대

- (규제 완화의 잠재적 부작용) 은행규제 완화로 인해 소매 투자자 및 예금자 보호 약화, 위기 발생 시 은행 회복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 상존

- 법무법인 Reeds Smith 소속 변호사는 “불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철폐는 환영이지만, 적정 선을 찾는 것이 난제”라면서 규제완화로 소비자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지적
- 일각에서는 규제 당국이 과거 위기의 교훈으로 도입 및 강화해온 조치들을 다시 완화하는 것에 대해 ‘규제 기억상실증_{regulatory amnesia}’에 걸렸다는 비판 제기
- 리즈 개혁으로 인해 소비자와 은행들의 위험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SM & CR 규제 완화로 투자 손실 및 위기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
- '23년 미국 SVB 사태처럼 손실 흡수 장치가 취약한 은행에서 유동성 위기가 지급불능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, MREL 완화는 예금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(Reuters)

- [평가] 영국 정부의 리즈 개혁이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과잉 규제를 정상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, 아니면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추후 영향을 지켜볼 필요

- 영국은 '22.12월 금융규제 개혁안(Edinburgh Reforms)을 발표한데 이어 2년 반 만에 추가 개혁 조치를 공개하며 자국의 글로벌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
 -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은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 기조로 선회하면서 영국도 금융 규제를 추가 완화하며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 체계는 경쟁을 촉진하거나 영국 4대 은행의 과점 구도를 해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(Shore Capital)
- 시중은행·자산운용사 등 금융업계는 영국 정부의 이번 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영국 금융회사 임원의 80% 이상은 금융개혁이 영국 금융부문 성장 촉진(86%), 해외 투자 유치(88%), 지속가능금융 및 핀테크 선도(83%)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(KPMG)
 - * 연초 대비 각각 +16%p, +20%p, +10%p
 - 정부의 야심적인 변화는 규제를 현대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며, 영국 금융서비스 부문 및 광범위한 경제의 성장을 가속할 것(HSBC UK의 CEO)
 - 이번 개혁은 개선의 여지(주식·현금 ISA 통합 등)가 있지만, '올바른 방향으로 큰 전진'. 특히 ISA 계좌에 장기투자자산펀드(LTAF) 보유가 허용된 것을 환영(영국투자회사협회AIC)
- 다만 지정학적 긴장, 무역 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, 부정적 경제 충격이 규제 환경 변화로 취약해진 금융산업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.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시스템 안정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
 - 개혁의 단기적 성장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.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, 그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을 소지(JPMorgan)
 - 아울러 성장이 우선시됨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잠재
 - 39년전 영국 정부의 금융자유화 정책인 '금융빅뱅(Big Bang)' 실시로 인한 금융 팽창이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는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주목
- 특히, 세계적인 은행 규제완화 확산 추세가 최근 금융시장의 취약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은행금융부문의 팽창 및 은행과의 연계 확대와 맞물리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 향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
 - BOE 베일리 총재는 지난 2월, '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피해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
 - 참고로 BOE는 '25.1월 NBFi 구제금융기구인 CNRF(Contingent NBFi Repo Facility) 운영 시작. 위기 시 연기금 및 기타 비은행기관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. 헤지펀드의 접근권한도 검토 중

〈표 3〉 리즈 개혁의 주요 내용

소매투자 활성화unlocking retail investment	
배경	영국은 G7 국가들 중 소매투자 수준이 최저. 저축자들은 수익률이 저조한 한편, 기업들은 중요한 자금 공급원이 부족한 상황 - 영국은 최근 수십년간 주식이 현금저축보다 수익성 우수. 업계 추정에 따르면, 지난 10년간 주식 시장은 평균적으로 9%의 수익률을 낸 반면, 영국 성인 2.9천만명 이상이 1% 내외의 저금리 계좌에 현금을 비축
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금융권 주도의 캠페인 고객들에게 소매투자의 효용을 설명하는 등 투자 권장 캠페인 실시 ② 26.4월 금융자문 관련 선별적 지원(Targeted Support) 시행 동 조치 하에서 은행은 고객에게 저수익 당좌예금에서 고수익 주식투자 등으로 자금을 이동 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특정 투자기회를 고지 가능 ③ 투자상품 위험경고 개선 고객들이 상품의 위험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, 투자상품 선택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 ④ 정부의 저축계좌 개선 ISA 및 저축 개혁을 통해 현금 저축과 투자 사이에 균형을 모색. 그 일환으로 내년 주식형 ISA에 장기자산펀드 보유를 허용 ; 더 많은 개인이 혁신기업이나 인프라 등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부문에 투자 가능
투자·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제거Cutting red tape to attract investment and drive growth	
배경	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불필요한 금융 규제 및 요식 행위를 과감히 철폐할 필요
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컨시어지 서비스 영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서비스 기업 적극 유치, 전국 클러스터(Edinburgh - 자산 관리, Leeds/Cardiff- 핀테크, Norwich/Norfolk-보험)를 활용,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일원화된 창구 마련 ② 모기지 대출 규제 완화 첫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(BOE 은행별 GLTI 대출 한도(총대출의 15%) 상향, Nationwide의 "Helping Hand" 지원 소득 기준 완화), FCA의 기존 차입자 재대출 규정 간소화, 정부의 고 LTV 상품에 대한 영구 모기지 보증 등 ③ 금융음부즈맨서비스(FOS) 개선 현재 준규제기관처럼 운영되면서 금융회사에 투자·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던 FOS를 제도 도입 취지(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단순하고 공정한 분쟁해결) 및 FCA의 규정과 일관되게 재정비 ④ 고위 관리자 및 인증 제도(SM&CR) 개선 고위 관리자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('16.3월)되었던 동 제도를 개선 (승인 속도, 업종·규모별 차등 적용, 사전승인 요구 대상 축소 등)해 기업의 전반적인 부담을 50% 정도 줄이는 것이 목표 ⑤ 도매금융 대상 소비자보호(Consumer Duty) 적용 예외 소비자보호 의무는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지만 현재 투자은행, 자산운용사 등 도매금융에도 영향. 이에 FCA는 도매은행에 대한 관련 영향 등을 평가
은행 투자여력 확대Freeing capital for investment	
배경	미국 등 주요 관할권에서 자본규제 완화 및 도입 지연 속, 영국도 자본규제를 완화해 은행들의 투자 여력을 확보
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최소자본규제*(MREL) 적용 기준 완화 BOE는 MREL 규제를 적용받는 중형 금융기관의 자산 기준을 상향(£150 ~250억 → £250억~400억)하고, '28년부터 경제규모를 고려해 3년마다 조정 계획 * 특정 규모 이상의 은행들이 파산 시 구제에 활용하기 위해 보유해야하는 최소 자본 및 적격 부채 ② 바젤III 최종규제 부분 시행 '27.1월부터 최종규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대출 및 투자활동에 명확성 제고. 투자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기반 자본규제(FRTB)는 다른 관할권의 규제 시행에 맞춰 '28.1월로 연기 ③ 링펜싱(Ring-fencing) 규제* 개혁 소매/SME 등 핵심예금 규모(3년 평균)가 £350억 이상인 은행의 경우, 소매-투자 은행 부문을 분리하는 링펜싱 규제('13년 도입-'19년 전면 적용) 개혁 계획 * 현재 재무부 및 영란은행이 단기 검토를 실시 중이며 '26년 초 결과 보고 예정
핀테크 부문 지원 및 혁신 촉진Promoting innovation and making the UK the Fintech capital of the world	
배경	핀테크 기업의 창업, 확장, 상장 단계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
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금융 비즈니스의 모델 검증 및 성장자금 유치 지원 ② 규제 창구 일원화 핀테크의 규제요건 이해 및 대응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지원 제공 ③ 영국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핀테크 등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£256억까지 확대(연간 투자 약 £25억)
금융서비스 부문의 인재 확보 지원	
배경	'35년 금융서비스 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, 적절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
조치	Global Talent Taskforce 를 통해 우수 인재들을 영국으로 유치 ; TechFirst 프로그램(£1.87억) 하에서 박사 과정 학생 50명에게 자금을 지원, 동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의 요구에 맞는 연구 지원 등

자료: Gov.UK, BOE, 외신 종합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156 혹은 wjhwang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